



NARS 현안분석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그린란드 이슈와 미-유럽 관계 전망

심성은

미 거래주의 외교 정책으로 인한 국제질서 다극화와 시사점

- ❖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로 미-유럽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미국은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망 구축, 자원 개발, 북극항로 선점을 위하여 군사적 강압과 보복 관세로 그린란드와 유럽을 압박하였으나, 다보스 포럼에서의 합의로 극단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이후 미-덴마크-그린란드 간 3자 협상이 진행 중이다.
- ❖ 미국의 일방주의적 거래 외교는 대서양 동맹에 구조적 균열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리된 협력'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심화를 모색하여 국제 질서의 다극화가 촉발되고 있다.
- ❖ 국제 질서 급변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주국방 역량 고도화와 북극항로 및 자원 외교의 전략적 내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가치 공유국과의 다층적 연대를 통해 대미 외교협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Greenland Issue and The Prospects of U.S.–Europe Relations

Multipolar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due to
U.S. Transactional Foreign Policy and Its Implications



I 들어가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로 미-유럽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전략적 동기는 중·러 ICBM에 대응할 수 있는 전진 기지 구축, 희토류와 천연가스 등 핵심 자원 공급망 선점,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의 요충지 확보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은 2019년에 처음 제기되었으며 2026년 들어 격화되었다. 1월 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 수단(hard way) 동원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23일 발표된 국가방위전략(NDS)에서도 현지 기지 확대를 천명하자 일각에서는 이를 ‘그린란드 위기(Greenland Crisis)’로 규정하였다.¹⁾ 이후 다보스 포럼에서 미-NATO 긴급 회담을 통해 미국이 무력 행사와 추가 관세 방침을 철회하며 갈등은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으나, 기지 운영권, 자원 개발 이익 배분을 둘러싼 미-덴마크-그린란드 간 후속 협상이 진행되면서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비롯한 EU 및 회원국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편입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가 1814년 그린란드를 공식적으로 자국령으로 귀속시킨 뒤, 그린란드는 1979년 자치령 지위 획득과 2009년 자치정부 구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확대해 왔다. 유럽 각국은 관세 분쟁과 안보 갈등에 이어 동맹국의 영토 주권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행보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거래주의적 외교로 촉발된 이번 분쟁은 미국의 정책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대서양 동맹에 구조적 균열을 야기하였다.²⁾ 이에 대응하여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리된 협력’ 및 인도-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심화를 통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의 추이와 국제질서의 변동성을 주시하며,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고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유럽 간 분쟁의 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 방향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Paul Adams, “US allies won’t forget Trump Greenland crisis”, BBC, Jan. 22, 2026.

2) 이성원, 「미국 전략 문서와 그린란드 이슈를 통해 본 미-유럽 관계: 동맹의 균열인가 재조정인가?」,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6.2.3.

II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 연혁과 배경

가.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 연혁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1868년 윌리엄 수어드(William Seward) 국무장관의 지시로 발간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자원 보고서 (A Report on the Resources of Iceland and Greenland)」에서 매장 자원 가치를 분석하고 영토 매입을 검토하던 때였다.³⁾ 1910년대 초에는 미국이 점유하던 필리핀의 일부와 그린란드 맞교환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였으며,⁴⁾ 1946년에는 군사 기지 유지와 지정학적 요충지 선점을 목적으로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1억 달러 어치 금화로 매입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⁵⁾

표 1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 연혁

시기	주요 내용	결과
1868	그린란드 자원 분석 보고서 작성 후 매입 검토	공식 제안 전 미국 내 정치적 혼란으로 무산
1910년대 초	필리핀 일부와 그린란드 간 맞교환 방식을 비공식 검토	1917년 덴마크령 버진아일랜드 매입 시, 덴마크의 그린란드 주권 인정
1946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1억 달러로 매입하겠다고 제안	덴마크 정부 거절
2019	전략적 위치와 자원 확보 목적의 매수 의사 공식 표명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반발로 불발
2025 - 2026	매입,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1인당 10만 달러), 무력 사용 등 공격적인 편입 시도	덴마크와 그린란드, 유럽의 반발로 현재 군사기지 확충과 미국의 투자 확대에 관해 협상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그린란드 편입을 시도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처음 관심을 보인 것은 2019년, 이를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 비유하며 공식 매수를 제안했을 때였다.⁶⁾ 그러나 덴마크가 이를 거절하며 외교 현안에서 멀어지는 듯했으나, 2024년 12월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과 파나마 운하 통제권 회수를 골자로 한 ‘반구 안보 (Hemispheric Security)’ 구상을 발표하며 재추진되었다.⁷⁾ 취임 직후에는 측근들에게 매입 협상안 수립을 지시했으며, 그린란드 주민을 대상으로 한 10만 달러의 현금 지급안에 이어 2026년 1월 9일에는 무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강압적인 실용주의 외교 전략을 강행했다.

3)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 Report on the Resources of Iceland and Greenland*, 1868.
 4) U.S. Department of State,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Address of the President to Congress*, Dec. 4, 1917.
 5) Marc Weller, “Who owns Greenland?”, Chattham house, Jan. 9, 2026.
 6) Martin Pengelly, “Trump confirms he is considering attempt to buy Greenland”, *The Guardian*, Aug. 18, 2019.
 7) “President-elect Donald Trump from Mar-a-Lago”, <<https://www.youtube.com/watch?v=YdqVeYdB3zl>> (검색일: 2026.2.5.).

유럽은 정치적 연대로 대응하였다. 2026년 1월,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은 그린란드에서 북극의 인내(Arctic Endurance) 훈련을 개시하였다.⁸⁾ 이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10%의 보복 관세를 선언하자, 다시 EU는 「제3국의 EU와 회원국에 대한 경제 협박 관련 규칙 2023/2675」⁹⁾(ACI)에 따라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서고자 했다. 폰테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키고 국제법과 주권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하였으며, 주요국 정상들도 미국을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¹⁰⁾ 미-유럽 간 갈등은 1월 21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뤼터 NATO 사무총장 간의 협상으로 극적 타결되어 무력 사용과 징벌적 관세 방침은 백지화되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 간 세부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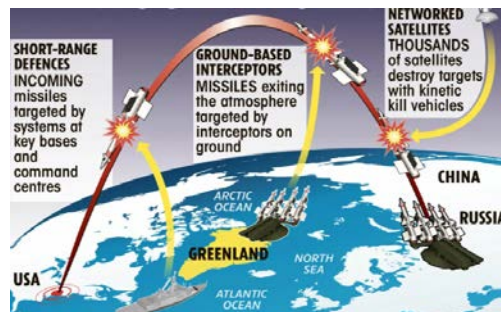
미국은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망 구축,
자원 개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하여
그린란드
편입을
시도하고 있음

나. 왜 그린란드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린란드 편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전략적 요인으로 압축된다.

첫째,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가치 때문이다. 그린란드는 미국, 중국, 러시아 간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부터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왔는데¹¹⁾ 그 일부를 그린란드 내에 배치하여 중·러의 ICBM 공격에 대한 방어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한다.¹²⁾ 특히 러시아는 2010년대에 북극 군 기지를 현대화하고 북극 지휘 체계를 보완하였으며, 중국도 2018년 북극인접국가(Near-Arctic State)를 선포하는 등¹³⁾ 중·러의 북극 진출 가속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그린란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 그린란드 관련 중국 및 러시아 ICBM과 미국의 방어 개념도



출처: Martina Bet, "TRUMP CARD How Greenland is vital part of Donald Trump's 'Golden Dome' plan to protect US if it comes under attack", *The Sun*, Jan. 19, 2026.

8) Danish Defence, Arctic Endurance continues throughout 2026, <<https://www.forsvaret.dk/en/news/2026/arctic-endurance-fortsatter-i-hele-2026/>> (검색일: 2026.2.11.).

9) Regulation 2023/2675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10) "Europeans reeling as Trump threatens tariffs on 8 countries over Greenland dispute", CBS News, Jan. 19, 2026.;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관세"... 유럽 "공동 대응"", KBS, 2026.1.18.

11) U.S. Executive Order 14186.

12) Donald Trump, Truth Details,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5893255826342514>> (검색일: 2026.1.20.).

13) The State Council of China, *China's Arctic Policy*, <https://english.www.gov.cn/archive/white_paper/2018/01/26/content_281476026660336.htm> (검색일: 2026.2.6.).

둘째, 전략 자원의 확보와 공급망 통제 목적도 있다. 그린란드에는 EU 지정 핵심원자재 중 25종과 막대한 양의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¹⁴⁾ 그린란드 자원 개발권을 획득할 경우 미국은 중국 자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된다. 2025년 미국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71%였으며, 이트륨(70%), 미스무트(56%), 안티모니(55%), 흑연(46%)과 같은 핵심광물 의존도도 높은 편이다.¹⁵⁾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핵심광물 지배법(Critical Minerals Dominance Act)」 채택, 11월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대체하는 ‘신뢰 가능한 자원과 글로벌 에너지 포럼(Forum on Reliable Resources and Global Energy)’ 발족, 2026년 2월에는 볼트 프로젝트(Project Vault) 발표 등을 통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¹⁶⁾ 더 나아가 2026년 1월에는 덴마크와 북극 자원 공동 관리 관련 협정을 상반기까지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자원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2 그린란드 자원과 매장량 추정치(2023)

매장 추정 자원	천 톤(t)	용도
희토류	36,100	모터, 미사일 유도장치, 디스플레이 제품
티타늄	12,100	항공기, 우주선, 잠수함, 미사일
텅스텐	26.2	반도체 공정, 철갑탄
갈륨	152	반도체, LED
흑연	6,000	이차전지, 윤활제
리튬	235	이차전지, 항공기, 연료 탱크
구리	108	이차전지, 전선 케이블
석유(억 배럴)	약 175~480	에너지, 석유화학 제품
천연가스 (10억 m ³)	419	에너지

설명: 석유는 그린란드 인근 해상 매장 추정량을 포함한 것으로 기관마다 수치가 상이함.

출처: Geological Survey of Denmark and Greenland (GEUS) (Argus, Greenland's resources face extraction hurdles, Jan. 16, 2026에서 재인용); USGS, Assessment of undiscovered conventional oil and gas resources of the West Greenland-East Canada Province, 2023.; 장원석, 「트럼프 탐내는 이유있다, 그만큼 자원 무궁무진한 '북극권 중심' [창간 60년-신패권 전쟁]」, 『중앙일보』, 2025.9.24.

셋째, 북극항로의 주도권 확보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해빙으로 인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국제 협력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동아시아와 유럽 간 항해 거리를 수에즈 운하 경로 대비 약 40%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비 절감과 군사적 기동성, 해상 통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항로를 내해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항만과 군사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며,

14) The World Data, Greenland Rare Earth Minerals Statistics 2026 | Key Facts, Jan. 11, 2026.; Otto Svendsen, Seizing Greenland Is Worse Than a Bad Deal, CSIS, Jan. 21, 2025.; European Commission, EU and Greenland sign strategic partnership on sustainable raw materials value chains, Press Release, Nov. 30, 2023.

15)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 Feb. 2026, p.12.

16) 볼트 프로젝트는 민간 합동 핵심광물 비축을 목적으로 함. Export-Import Bank of the U.S., Project Vault and the U.S. Strategic Critical Mineral Reserv, <<https://www.exim.gov/news/week-review-project-vault-and-strategic-critical-mineral-reserve>> (검색일: 2026.2.12.).

중국도 북극 실�크로드(Polar Silk Road) 구상을 통해 북극 해상 교통로와 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¹⁷⁾ 미국은 이를 2019년부터 잠재적 안보 도전으로 규정하여 견제하고 있다.¹⁸⁾

Ⅲ 그린란드 이슈 관련 주요 쟁점

미국은 협상에서 배타적 군사 접근권과 자원 개발권 확보를 목표로 함

2026년 2월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및 덴마크와 협상 중이다. 1월 29일 경 미국과 덴마크 간 비공개 고위급 실무회의가 있었으며, 2월 13일 원한안보회의에서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3자 회담이 개최되는 등 공개와 비공개 협상이 병행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다보스 포럼에서 합의된 미래 합의 프레임워크(Framework of a future deal)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미국의 협상 목적은 배타적 군사 접근권과 자원 개발권의 확보다.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기존의 「미-덴마크 1951년 4월 27일 합의: 그린란드 안보」¹⁹⁾(미-덴마크 방위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에 피투픽 우주군 기지(Pituffik Space Force Base, 구 툴레 기지)를 두고 있다. 주둔 병력은 한 때 2만 명까지 커졌으나 지금은 200여 명으로 축소되었다. 향후 미국은 방위협정 개정을 통해 골든 돔을 그린란드 곳곳에 배치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2025년 6월 그린란드 작전 관할권을 유럽사령부(EUCOM)에서 북부 사령부(NORTHCOM)로 이전한 것과²⁰⁾ 궤를 같이한다.

2004년, 미국은 이길라쿠 협정에 합의하며 미-덴마크 방위협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요 작전 시설을 변경하거나 기지를 확대할 경우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사전 통보한 뒤 협상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덴마크 방위협정에 따라 미국이 군사 기지 확대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길라쿠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그린란드 및 덴마크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²¹⁾

미국의 두 번째 목표는 그린란드의 자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만 그린란드 광물 개발 프로젝트와 채굴된 광물 이송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공망 고립화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 자본의 그린란드 희토류 광산 투자도 견제하고 있다.²²⁾ 일례로 2025년 6월, 미 수출입은행(EXIM)은 그린란드 탄브리즈(Tanbreez) 광산에 대한 1억 2천만 달러 차관 지원 의향을 표명

17) State Council of China, *China's Arctic Policy*, Jan. 2018.

18)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to Congress Department of Defense Arctic Strategy*, 2019, pp.5-6.;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2022, pp.1, 4, 7, 9.

19) Defense of Greenland: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the Kingdom of Denmark, Apr. 27, 1951.

20) U.S. Northern Command, Greenland now in U.S. Northern Command area of responsibility, <<https://www.northcom.mil/Newsroom/Press-Releases/Article/4218865/greenland-now-in-us-northern-command-area-of-responsibility/>> (검색일: 2026.2.16.).

21) Allen Gindler, "Greenland and the Art of the Deal? How a Legally Settled Alliance Issue Became a Spectacle," Independent Institute, January 30, 2026.; Paul McLeary and Jack Detsch, "Old Wine in a New Bottle": Greenland Negotiations Resemble an Earlier Deal," Politico, Jan. 22, 2026.

22) Ed Struzik, "U.S. Push for Greenland's Minerals Faces Harsh Arctic Realities," Yale Environment 360, Feb 4, 2026.

**덴마크,
그린란드,
그 외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 주권
양도 불가,
다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하여 미·중 희토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²³⁾

2025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자원보다는 안보 목적이 주된 이유라고 주장한 바 있다.²⁴⁾ 그러나 군 기지 확대에 대해 덴마크가 이미 찬성하고 있고, 러시아의 그린란드 침공 우려도 낮으며 덴마크가 중국의 그린란드 투자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는 공급망 통제권을 독점하려는 자원 민족주의의 발현이라는 주장도 있다.²⁵⁾

대미 협상에서 유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관점을 공유한다.

첫째, 그린란드는 국제법상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권 양도는 협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6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미국은 “유럽과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길 희망하지만, 필요하다면 혼자서라도(prepared to do this alone)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²⁶⁾ 이에 대해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편입 의지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박하였으며, 닐센 그린란드 총리 또한 “동맹국의 행태로 현지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하였다.²⁷⁾ 아울러 덴마크는 2009년 그린란드 자치법(Self-Government Act)에 따라 자원 개발권의 주체는 그린란드 정부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²⁸⁾

둘째, 유럽은 그린란드 시안을 미-그린란드 또는 미-덴마크 간의 폐쇄적인 양자 거래가 아닌, 국제법, NATO의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다자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2026년 1월 덴마크는 기존 방위 협정과 이길라쿠 협정에 따라 미군 인프라 확대와 골든 돔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고 표명하였다.²⁹⁾

이와 동시에 NATO의 북극권 내 역할도 강화되는 추세다. 2026년 2월 11일, NATO는 아크틱 센트리(Arctic Sentry)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유럽 주도의 군사 훈련인 ‘북극의 인내’와 3월에 시행될 노르웨이 주도의 콜드 리스폰스 2026(Cold Response 2026) 등을 통합하여 북극권 내 다자적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³⁰⁾

23) Staff Writer, “Critical Metals in line for \$120M US loan to fund Greenland rare earth project,” Jun 15, 2025, <<https://www.mining.com/critical-metals-in-line-for-120m-us-loan-to-fund-greenland-rare-earth-project/>> (검색일: 2026.2.15.).

24) Alexander Smith, “Security fears and dreams of minerals behind Trump’s push to ‘own’ Greenland, experts say”, NBC News, Jan. 10, 2026.; Issy Ronald and Kara Fox, “Why does Trump want Greenland and why is it so important?” CNN, Jan. 22, 2026.

25) Lily Mae Lazarus, “Trump’s Greenland takeover would require ‘billions upon billions’ spent over decades for a mineral industry that doesn’t yet exist, experts say,” *Fortune*, Jan. 7, 2026,

26)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of State Calls on European Leaders to Defend Western Civilization in Munich Security Conference Speech*, Feb. 14, 2026.

27) Jakub Krupa, “US pressure on Greenland is ‘totally unacceptable’, says Danish PM – as it happened”, *The Guardian*, Feb. 15, 2026.

28) KP net, “USA vil kontrollere markedet for kritiske mineraler – hvordan indgår de hemmelige forhandler om Grønland?”, <<https://kpnet.dk/2026/02/12/usa-vil-bygge-marked-for-kritiske-mineraler-hvordan-indgaar-de-hemmelige-forhandlinger-om-kontrol-med-groenland/>> (검색일: 2026.2.18.).

29) “Greenland’s prime minister demands respect for sovereignty in U.S. talks”, CBC, Jan. 23, 2026.; Sarah E. Garding, “Greenland, Denmark, and U.S. Relations”, Washington, D.C.: CRS, Jan. 22, 2026.

30) NATO, *NATO Secretary General outlines new activity – Arctic Sentry – ahead of Defence Ministers meeting*, Feb. 11, 2026.

마지막으로 유럽 측은 북극권 내 중·러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안보적 명분에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NATO는 아크틱 센트리 발표 시 “아시아의 군사 활동 증가와 중국의 북극 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함으로써,³¹⁾ 대중 대러 공동 대응이 대서양 동맹의 공동 안보 이익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유럽 내에도 미세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대규모 자본 유입을 통해 광산 개발·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³²⁾ 반면, 덴마크는 미국의 경제적 보복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자국의 영토적 통합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미국의 태도가 “그린란드에 대한 제국주의적 수사와 주권 경시”와 다름없으며, 이는 NATO 신뢰 훼손은 물론 북극 거버넌스 및 전 세계 안보 체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³³⁾ EU는 1월 22일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ACI가 효과적이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미-유럽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전략적 자율성을 재차 강조하며 재무장 전략을 가속화할 예정이다.³⁴⁾

IV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향후 전망

그린란드와 관련된 미-유럽 간 갈등은 미국과 유럽의 국내 정책과 대서양 동맹뿐만 아니라,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 등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정책이 다시 강경책으로 선화하더라도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방적인 무력 사용은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집단방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유럽과 세계 동맹 네트워크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비용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의 피투픽 우주 기지와 미-덴마크 방위협정을 활용하면 골든 돔 배치와 같은 핵심 안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군사적 행동의 명분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거래적 외교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고립, 그린란드 자치정부와의 직접 접촉 확대를 병행하는 등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31) 앞의 글.

32) Muflih Hidayat, “Greenland’s Critical Minerals Spark International Strategic Competition”, Discovery Alert, Jan. 27, 2026.

33) Christopher Vandome, “If Trump wants 2026 to be a year of critical minerals collaboration, he must stop imperialist rhetoric on Greenland”, Chatham House, Jan. 16, 2026.

34) EPRS, *Outcome of the informal European Council meeting of 22 January 2026*, Jan. 28, 2026.

미국 내에서도 무력 사용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6년 1월 12일 미 연방 하원에서는 「그린란드 주권 보호법(Greenland Sovereignty Protection Act)」을 발의하여 동맹국 주권 침해 방지책을 마련 중이며,³⁵⁾ 1월 13일에는 미 상원에서 「NATO 결속 보호법(NATO Unity Protection Act)」을 발의하여 해당 국가의 동의나 북대서양 이사회(NAC)의 승인 없이 NATO 동맹국의 주권 영토를 봉쇄, 점령, 합병하거나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국방부와 국무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³⁶⁾ 그린란드 합병 지지 여론도 높지 않다. 2026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조사된 YouGov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매입에 관하여 응답자 중 29%, 무력 사용에는 9%만이 찬성하였다.³⁷⁾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으나,
미-유럽 동맹
약화와 유럽의
군비 확충,
유럽의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 변화로
인한 국제 질서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둘째, 대서양 동맹의 구조적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의 관세 분쟁과 안보 부담금 인상 요구, 영토 편입 압박을 동맹의 가치 훼손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2025년 12월 NSS에서 유럽의 현 상황을 문명적 삭제(civilizational erasure) 위기로 규정하는 등 양측의 이념적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서양 동맹은 가치 공유에 기반한 관계보다는 영토와 통상 갈등이 안보 현안과 복합적으로 얽힌 기능적 하청 관계 또는 불편한 동거 체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³⁸⁾

셋째,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과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폰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변화가 영구적이라면, 유럽도 영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³⁹⁾ 메르츠 독일 총리도 대서양 동맹의 복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힘과 군사력이 중심이 되는 세계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유럽도 안보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⁴⁰⁾ 이에 따라 EU는 연내 ‘신유럽 안보 전략(New European Security Strategy)’ 발표를 예고하였으며,⁴¹⁾ EU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는 2월 18일 방위-경제 협의회(E6)를 구성하여 3월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는 등 EU 내 ‘유럽의 이중 속도(Two-speed Europe)’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⁴²⁾

35) U.S. Congress, H.R.7013 – Greenland Sovereignty Protection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7013>> (검색일: 2026.2.19.).

36) U.S. Congress, S.3624 – NATO UP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3624>> (검색일: 2026.2.19.).

37) Taylor Orth, “American knowledge about Greenland varies but very few support a military takeover”, YouGov, Jan. 21, 2026.

38) Monika Sus, “Functional Adaptation without much Love: NATO and the Strains of EU-US Relations”, in Marianne Riddervold et. al.(ed.), *Populism and the Future of Transatlantic Relation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European Center for Populism Studies, Jan. 20, 2026.

39) European Commission, *Special Address by President von der Leyen at the World Economic Forum*, Jan. 20, 2026.

40) “Special Address by Friedrich Merz, Federal Chancellor of Germany”, World Economic Forum, Jan. 23, 2026.

41) Henry Foy, “Von der Leyen says Europe must bring its mutual defence clause ‘to life’”, *The Financial Times*, Feb. 14, 2026.

42)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f Germany, *The E6: an initiative led by six leading European economies to strengthen European sovereignty, competitiveness and defence capabilities*, Jan. 28, 2026.

이에 따라 유럽의 재무장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2025년 3월 '방위태세 2030(Readiness 2030)'을 통해 재무장을 결정하고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독일은 자국군을 유럽 최강 수준으로 재편성하고 연말까지 5,000명 규모의 여단을 리투아니아에 배치할 계획이다.⁴³⁾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함께 프랑스 핵 억지력 활용 재설계와 미국의 핵 의존도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등⁴⁴⁾ 미국의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다만, 유럽 국가들의 군 지휘 구조 분절, 방산 역량의 중복, 조달 지연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상존하고 있어 전략적 책임에 부합하는 실질적 역량을 단기간 내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⁴⁵⁾

넷째, 유럽 대외 관계에서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이 제고되며 국제 질서의 다극화가 심화되고 있다.⁴⁶⁾ 유럽은 중국에 대해 디리싱 전략을 유지하되, 대중 무역 적자를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유럽은 2025년 1월 「공급망 실사지침(CSDDD)」, 7월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확정, 11월에는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제'를 도입하며 대중 견제 전략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2026년 들어 미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국에 대하여 '관리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정상들이 대규모 경제 대표단과 중국을 방문해 경제 협력, 무역 균형, 교역 확대를 논의하며 '조건부 실용주의'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2월 25일과 26일, 메르츠 독일 총리도 방중하여 자동차 산업 보호와 공급망 유지를 논의하며 유럽-중 관계를 재설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럽은 2026년 1월에 Mercosur와 FTA 문서에 공식 서명했으며, 인도와도 20년만에 FTA 협상을 타결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로도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은 국제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그린란드 분쟁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오랜 동맹국인 덴마크의 주권마저 압박하고 보복 관세로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 하에 동맹 구도가 재편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동맹 관리 능력과 안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보와 경제, 산업, 통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동맹국 간 갈등에서도 경제적 압박이 안보 위협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공급망 다변화, 경제적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전략적 자율성과
자주국방 강화,
안보와 경제
정책의 통합적
고려, 북극 항로
개척 참여,
중견국 간 연대
강화 전략을
도모해야 함**

43)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Speech by the Federal Chancellor at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on 13. February 2026 in Munich*, Feb. 13, 2026.

44) "Macron urges world to 'take cue' from Europe, not criticise it", France 24, Feb. 13, 2026.

45) Josh Lipsky and Jörn Fleck, *Greenland, Davos, and a week that could redefine the transatlantic alliance*, Atlantic Council, Jan. 19, 2026.

46) Timothy Garton Ash et. al., "How Trump is making China great again—and what it means for Europe", ECFR, Jan. 15, 2026.

소다자 협력체 구축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 안보 컨트롤타워의 통합적 기능 강화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셋째, 북극 항로와 자원 외교의 가치가 제고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북극항로와 북극권 개발에 참여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와 해운·조선과 극지 연구 강국이라는 점을 활용하고, 덴마크 및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교육·연구·기술 협력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부산-로테르담 간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기점으로 쇄빙 컨테이너선과 극저온을 견디는 특수강재 기술력을 공개함으로써 북극권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 항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북극 활동 진흥법」을 활용하여 민관 합동의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북극권 지정학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하여 덴마크와 유럽 7개국에 미국에 공동 대응하여 다보스에서 타협안을 도출한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유럽, 일본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유사 입장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외교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외교적 갈등 발생 시, 국제법과 다자 규범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관세”... 유럽 “공동 대응”, KBS, 2026.1.18.
- 이성원, 「미국 전략 문서와 그린란드 이슈를 통해 본 미-유럽 관계: 동맹의 균열인가 재조정인가?」,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6.2.3.
- 장원석, 「트럼프 탐내는 이유있다, 그만큼 자원 무궁무진한 '북극권 중심' [창간 60년-신패권 전장]」, 『중앙일보』, 2025.9.24.
- “Europeans reeling as Trump threatens tariffs on 8 countries over Greenland dispute”, CBS News, Jan. 19, 2026.
- “Greenland’s prime minister demands respect for sovereignty in U.S. talks”, CBC, Jan. 23, 2026.
- “Macron urges world to ‘take cue’ from Europe, not criticise it”, France 24, Feb. 13, 2026.
- “Special Address by Friedrich Merz, Federal Chancellor of Germany”, World Economic Forum, Jan. 23, 2026.
- Adams, Paul, “US allies won't forget Trump Greenland crisis”, BBC, Jan. 22, 2026.
- Argus, Greenland’s resources face extraction hurdles, Jan. 16, 2026.
- Ash, Timothy Garton et. al., “How Trump is making China great again—and what it means for Europe”, ECFR, Jan. 15, 2026.
- Bet, Martina, “TRUMP CARD How Greenland is vital part of Donald Trump’s ‘Golden Dome’ plan to protect US if it comes under attack”, *The Sun*, Jan. 19, 2026.
- EPRS, Outcome of the informal European Council meeting of 22 January 2026, Jan. 28, 2026.
- European Commission, EU and Greenland sign strategic partnership on sustainable raw materials value chains, Press Release, Nov. 30, 2023.
- _____, Special Address by President von der Leyen at the World Economic Forum, Jan. 20, 2026.
-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f Germany, The E6: an initiative led by six leading European economies to strengthen European sovereignty, competitiveness and defence capabilities, Jan. 28, 2026.
- Foy, Henry, “Von der Leyen says Europe must bring its mutual defence clause ‘to life’”, *The Financial Times*, Feb. 14, 2026.
- Garding, Sarah E., “Greenland, Denmark, and U.S. Relations”, Washington, D.C.: CRS, Jan. 22, 2026.
- Gindler, Allen, “Greenland and the Art of the Deal? How a Legally Settled Alliance Issue Became a Spectacle,” Independent Institute, Jan. 30, 2026.
- Hidayat, Muflih, “Greenland’s Critical Minerals Spark International Strategic Competition”, *Discovery Alert*, Jan. 27, 2026.
- Krupa, Jakub, “US pressure on Greenland is ‘totally unacceptable’, says Danish PM – as it happened”, *The Guardian*, Feb. 15, 2026.

- Lazarus, Lily Mae, “Trump’s Greenland takeover would require ‘billions upon billions’ spent over decades for a mineral industry that doesn’t yet exist, experts say,” *Fortune*, Jan. 7, 2026.
- Lipsky, Josh and Fleck, Jörn, Greenland, Davos, and a week that could redefine the transatlantic alliance, Atlantic Council, Jan. 19, 2026.
- McLeary, Paul and Detsch, Jack, “‘Old Wine in a New Bottle’: Greenland Negotiations Resemble an Earlier Deal,” Politico, Jan. 22, 2026.
- NATO, NATO Secretary General outlines new activity – Arctic Sentry – ahead of Defence Ministers meeting, Feb. 11, 2026.
- Orth, Taylor, “American knowledge about Greenland varies but very few support a military takeover”, YouGov, Jan. 21, 2026.
- Pengelly, Martin, “Trump confirms he is considering attempt to buy Greenland”, *The Guardian*, Aug. 18, 2019.
- Ronald, Issy and Fox, Kara, “Why does Trump want Greenland and why is it so important?” CNN, Jan. 22, 2026.
- Smith, Alexander, “Security fears and dreams of minerals behind Trump’s push to ‘own’ Greenland, experts say”, NBC News, Jan. 10, 2026.
- State Council of China, China’s Arctic Policy, Jan. 2018.
- Struzik, Ed, “U.S. Push for Greenland’s Minerals Faces Harsh Arctic Realities,” *Yale Environment 360*, Feb. 4, 2026.
- Sus, Monika, “Functional Adaptation without much Love: NATO and the Strains of EU-US Relations”, in Marianne Riddervold et. al.(edt.), *Populism and the Future of Transatlantic Relation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European Center for Populism Studies, Jan. 20, 2026.
- Svendsen, Otto, Seizing Greenland Is Worse Than a Bad Deal, CSIS, Jan. 21, 2025.
-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2022
- The World Data, Greenland Rare Earth Minerals Statistics 2026 | Key Facts, Jan. 11, 2026.
- Vandome, Christopher, “If Trump wants 2026 to be a year of critical minerals collaboration, he must stop imperialist rhetoric on Greenland”, Chatham House, Jan. 16, 2026.
- Weller, Marc, “Who owns Greenland?”, Chatham house, Jan. 9, 2026.
-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to Congress Department of Defense Arctic Strategy, 2019.
- U.S. Department of State,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Address of the President to Congress, Dec. 4, 1917.
- _____, Secretary of State Calls on European Leaders to Defend Western Civilization in Munich Security Conference Speech, Feb 14, 2026.
- U.S.G.S, Assessment of undiscovered conventional oil and gas resources of the West Greenland–East Canada Province, 2023.
- _____,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 Feb. 2026.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 Report on the Resources of Iceland and Greenland, 1868.

REPORT·LIST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398호	미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제한법) 판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2026.03.05.	정민정
제397호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피해자 중심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026.03.04.	김혜미
제396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	2026.03.04.	류영아
제395호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목적 정합형 연계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2026.02.19.	김경민
제394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관련 입법 논의 분석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026.02.18.	이상은·정재하
제393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규제, 어떻게 가능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안 검토	2026.02.12.	김범주·정재하
제392호	친생 추정에 막힌 381명의 '식별된 그림자 아동들' 출생통보제 시행 1년 6개월의 기록	2026.02.12.	허민숙
제391호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운영과 쟁점 우리 국회는 미국 상원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2026.02.11.	전진영
제390호	동물학대 재범차단을 위한 법적 방안 검토 보안처분으로서의 사육금지명령에 관하여	2026.02.09.	김광현·박찬미
제389호	지방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소환제도 재설계	2026.01.27.	하혜영·김형진
제388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명예훼손 법적 비교를 중심으로	2026.01.27.	최진응
제387호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와 유지의 갈림길에서	2026.01.26.	전진영
제386호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통합 이후 교육 사무 분장의 고차방정식	2026.01.14.	김범주
제385호	산업재해 근절 대책으로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설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개편 제안-	2025.12.29.	이동영
제384호	1인 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대응방안	2025.12.26.	장경석
제383호	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읍·면 지역 고령가구의 식생활 돌봄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2025.12.26.	장영주
제382호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NCC) 도입 방안 모색	2025.12.24.	이동관
제381호	APEC 美·中 희토류 전쟁 1년 휴전, 韓 기회인가? : 수출통제 유예 조치의 합의와 핵심광물 안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25.12.23.	김수정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380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	2025.12.22.	한진욱
제379호	전공의를 어떻게 '수련'에 집중하게 할 것인가 주요국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25.12.22.	김은정
제378호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과제 : 신뢰 회복부터 지역·필수의료 정상화까지	2025.12.22.	임사무엘
제377호	전면 재설계를 필요로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	2025.12.18.	배성희
제376호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방안 - 1·2차 합의 이행점검과 심야배송 제한 논의를 중심으로	2025.12.17.	한인상·구세주
제375호	디지털 시대, 선거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과 과제	2025.12.17.	김현아
제374호	국회 국정감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현행 제도의 개선, 또는 상시감사체제로의 전환 사이에서	2025.12.11.	전진영·문경미
제373호	'복지 탈신청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 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 및 주요 법률 개정 제안	2025.12.07.	정용제
제372호	통신사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구제: 집단소송제와 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 방안	2025.11.26.	박소영
제371호	경영판단원칙, 이사 책임에 대한 입법적 방어수단 검토	2025.11.26.	이수진
제370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2025.11.24.	장경석
제369호	국민참여방식 헌법개정을 위한 고려사항	2025.11.17.	김선화·송정민
제368호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	2025.11.12.	정재하
제367호	농업분야 ODA사업의 상호호혜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2025.11.04.	장영주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그린란드 이슈와 미-유럽 관계 전망

미 거래주의 외교 정책으로 인한 국제질서 다극화와 시사점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저자 | 심성은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정치학 박사
02-6788-4529 shimsungeun@assembly.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1614-14
ISSN 2586-565X